



새수영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수영구보

호외 제684호 2022. 12. 20.(화)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6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44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92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	10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1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0

규 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44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5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56

회 람								
--------	--	--	--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주소와 사업장을”을 “사업장을”로 한다.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

제8조의 제목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을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4조에 의한 소상공인 연합회”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 연합회”를 “소상공인연합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4. (생략)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 <u>사업장</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경영안정 및 창업 등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4. (생략) <신설>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6조(경영안정 및 창업 등 지원)----- ----- ----- -----. 1.~4. (현행과 같음) 5.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사업 지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

<p>제8조(<u>소상공인 연합회 지원</u>) ① 구청장은 <u>법 제24조에 의한 소상공인 연합회</u>의 설립을 권장하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u>소상공인 연합회</u>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u>소상공인연합회 지원</u>) ①-- --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4조에 따른 <u>소상공인연합회</u>-----.</p> <p>②----- ----- -----<u>소상공인연합회</u>-----.</p>
---	---

◆ 제안이유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추진에 따라 소상공인의 범위를 수영구 소재의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 반영(제2조)
- 나.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제3조)
- 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사업내용 추가(제6조)
-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정비(제8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복무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공무원증)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에서 무단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여성공무원과 부부공무원 중 1명은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부공무원 중 1명이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겸임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지휘·감독 한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 공무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반일(오전, 오후) 또는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별표 4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 신병훈련 수료식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1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구청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하지 않음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2022년 노·사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복무 선서 및 책임완수, 친절·공정 등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제2조~제5조)
- 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제7조)
- 다. 겸임 및 파견근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제9조)
- 라.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제10조)
- 마.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제11조)
- 바. 연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제12조~제1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를 관할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
3.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담당관
7. 부산해양경찰서장

제8조제1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총무업무”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업무”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 등에 대해서는”을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구성) ①~② (생략)	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구 지역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u>	2. <u>구를 관할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u>
3. <u>국가정보원의 관계자</u>	3. <u>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 담당관</u>
4.~6. (생략)	4.~6. (현행과 같음)
7. <u>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u>	7. <u>부산해양경찰서장</u>
8.~15. (생략)	8.~15.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분기마다 <u>한차례</u>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경계 태세 1급, 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8조(회의) ①----- ----- ----- <u>한 차례</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p>3. 총무담당간사 : 구 <u>총무업무</u> 담당과장</p> <p>제11조(수당 등) <u>협의회</u>의 <u>위원</u> 등에 <u>대해서는</u>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u>통합방위</u> <u>협의회</u> <u>운영업무</u>-----</p> <p>제11조(수당 등)-----<u>위원</u> <u>에게는</u>----- ----- ----- ----- -----.</p>
--	--

◆ 제안이유

유관기관 및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 업무의 혼선을 막고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함.

◆ 주요내용

- 가. 유관 기관장 명칭 및 구 업무 관련 단어 정비(제4조, 제10조)
-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제8조, 제1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사람은 주민투표권을 갖는다”를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산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에는 해당 통·반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를 “성명·생년월일·주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하며,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3조

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안전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6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4일이내에”를 “14일이내에”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에 당해”를 “기간 내에 해당”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6조)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교 부 신 청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해당없음	
	변경 사유			
<p>「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외국인의 경우 주소란에 체류지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작성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외국인의 경우 주소란에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p>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외국인의 경우 주소란에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외국인의 경우 주소란에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청 구 인 서 명 부 표 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및 ○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및 ○○동(○책중 ○권)’에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 서명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외국인의 경우 주소란에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본인의 도장을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외국인의 경우 주소란에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외국인의 경우 주소란에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구조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의 책무) ① ~ ③ (생략)	제2조(구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u>재외국민 또는 외국인</u> 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 <u>외국인</u> ----- -----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u>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u>사람은 주민투표권을 갖는다.</u>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u> ----- ----- ----- ----- ----- <u>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u>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 포함)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에 관한 사항	<삭 제>

2.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구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
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②-----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반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성명·생년월일·주소-----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서명의 확인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은 회의개최 사유발생시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한다.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하며,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주민투표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p><u>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④ 의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u></p> <p><u>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14조(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 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u></p>
<p><u><신 설></u></p>	<p><u>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u></p>
<p><u>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u></p>	<p><u>제16조(처리기간) ①-----청구인 대표자증명서-----</u></p>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른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생략)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생략)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청구인대표자증명서

②

14일 이내에

③

기간 내에 해당

해당

범위
에서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현행 제14
조와 같음)

제18조(주민투표청수서 등의 서식)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9조(공표방법 등)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 제4항 및 <u>법 제13조제2항</u> 에 따른 공고는 수영구보와 <u>인터넷 홈페이지</u> 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	----- ----- <u>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u> <u>제1항, 제4항 및 제5항</u> ----- <u>구 홈페이지</u> -----.
---	--

◆ 제안이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기준 하향 조정 등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재외국민’ 및 ‘거소’ 규정 삭제(제2조, 제8조~제9조)
-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제3조)
- 다. 전자서명을 이용한 주민투표청구 관련 내용 정비(제8조제1항, 제10조)
- 라. 통·반 단위의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제2항)
-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제12조~제15조)
- 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제16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④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다만, 구청장이 해당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선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19조,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답례품의 종류)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 및 육성하는 중소 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

제6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생산·제조 기반시설 등이 구에 있는지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온라인 쇼핑몰 및 TV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목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려는 사람의 본인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0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2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구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4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전의 원인이 된 처분 등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 보고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3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 모집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기금 계좌의 개설이 된 이후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
운용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처음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사항을 정하고 제도 실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제1조)

나.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제2조~제4조)

다. 답례품의 종류 및 공급업체 선정 등(제5조~제8조)

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제9조)

마.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제10조~제13조)

바. 고향사랑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제14조~제2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해임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재위촉시”를 “재임명 시”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편의제공) 통·반장은 동의 공부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5조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u></p> <p><u>① 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u></p> <p><u>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u></p> <p><u>1.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동장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방식으로 통장을 선발할 수 있다.</u></p> <p><u>2. 반장은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u></p> <p><u>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p> <p><u>③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u></p> <p><u>④ 동장은 통·반장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u></p> <p><u>1. 통·반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활동 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u></p>	<p><u>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u></p> <p><u>② 통·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해임한다.</u></p>

2. 통·반장의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건강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해당 지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6. 해당 통·반을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7. 그 밖의 사유로 통·반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6조 (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상회에서 추천하여 동장이 위촉
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10조(활동상황의 평가) 동장은 통장의
활동상황을 연 1회 이상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장 재위촉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삭 제>

제10조(활동상황의 평가)-----

-----재임명 시
-----.

제13조(편의제공) 통·반장은 동의 공부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안이유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에 운영상의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통·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 개정(제5조)
- 나. 유명무실한 명예반장 제도 조항 삭제(제6조)
- 다. 통·반장의 “위·해촉” 용어를 “임명·해임”으로 정비(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체육진흥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범 구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대회 및 행사 개최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과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운영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 중 “부산광역시수영구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부산광역시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 사업과 활동”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생활체육 동호인”을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 제>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 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4. “생활체육 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5. “생활체육 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교실”의 명칭으로 직접 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생략)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생활체육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대회 및 행사 개최와 지원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각종 생활체육 단체의 육성 지원
5. 생활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6. 생활체육 교실 설치·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체육진흥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범 구민 생활체육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대회 및 행사 개최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과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p>제5조(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u>부산광역시수영구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u> 하기 위한 수영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8조(강사 위촉) ①~② (생략)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표창)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p> <p>1. 구 생활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u>생활체육 동호인</u></p> <p>2.~4. (생략)</p> <p>② (생략)</p>	<p>③ <u>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운영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u></p> <p>제5조(기금의 설치)----- -----<u>부산광역시 수영구</u> (이하 “구”라 한다)의 <u>체육진흥 사업과 활동</u>----- -----.</p> <p>제8조(강사 위촉) ①~② (현행과 같음) ③-----<u>범위에서</u>-----.</p> <p>제11조(표창) ① <u>법 제14조제2항</u>----- ----- -----.</p> <p>1.----- <u>체육동호인조직</u></p> <p>2.~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규정 정비를 통한 체육단체 운영 안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약칭 등 용어 정비(제2조·제3조·제5조·제8조·제11조)

나. 체육진흥 사업 지원 내용 규정(제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수탁자 선정 및 재위탁”을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의 갱신”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위탁운영 등) ①~⑤ (생략)	제14조(위탁운영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60일 전에 그동안 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려면 취소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9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은 수탁자가 책임진다.	⑥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의 갱신----- -----.
②~⑥ (생략)	②~⑥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따르도록 정비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정함(제14조제6항)
- 나. 민간위탁 관련 용어 변경(제15조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
지원 대상자”를 “급식지원 대상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 -----.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 급식지원 대상자----- ----- ----- -----.
1.~6. (생 략) ②~③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정비(제1조)
- 나. 불필요한 인용조문 정비(제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에서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하는 폐의약품”을 “폐의약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폐의약품의 처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폐의약품의 수집·보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2. 약국

3. 동 행정복지센터

4. 그 밖에 폐기물처리 담당부서 등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소각 처리해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8조제2항 관련)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 철판,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끈 등으로 묶어 배출 <p>※ 비해당품목 예시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p>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p>※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p>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 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그 밖의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p>※ 비해당품목 예시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 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p>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p>※ 비해당품목 예시 :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p>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p>※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p>
	· 그 밖의 캔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p>※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p> <p>※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p> <p>※ 비해당품목 예시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락카, 페인트통 등)</p>
마.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병	· 무색 또는 투명한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를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플라스틱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들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행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착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예시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M,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 1회용비닐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건조하여 배출 -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예시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 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들을 제거하여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예시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흰색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비해당품목 예시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자.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그 밖의 의류	- 폐의류 수거함에 배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문전 배출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그 밖의 합성섬유류	
차. 전지류	· 수은전지 · 산화은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리튬 1차전지 · 망간전지·알칼리 망간전지 · 니켈 수소전지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아서 문전 배출
카. 형광등	· 직관형(FL) · 환형(FCL) · 안정기 내장형(CFL) · 콤팩트형(FPL) · 그 밖에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문전 배출
타. 고철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등)	

비고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내용물이 보일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를 사용하여야 함

2.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나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 및 불연성생활폐기물용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탄재, <u>가정에서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하는 폐의약품</u>	2.----- <u>폐의약품</u>
3.~6. (생략)	3.~6.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제1항제1호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5와 같다.</u>
<u><신설></u>	<u>제8조의3(폐의약품의 처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u> <u>② 폐의약품의 수집·보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보건소</u> <u>2. 약국</u> <u>3. 동 행정복지센터</u> <u>4. 그 밖에 폐기물처리 담당부서 등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u> <u>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소각 처리해야 한다.</u>

◆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가능 폐기물 및 폐의약품의 배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생활폐기물과 혼용배출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활용도를 높이며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배출방법 규정(제8조제2항, 별표 5)
- 나. 폐의약품 배출 및 처리 방법 신설(제8조의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인 업소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납부필증의 판매·구입 및 무상제공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납부필증을 무상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4. (생략) <u><신설></u> 5.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납부필증의 판매·구입 및 무상제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4. (현행과 같음) 5. <u>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등록된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인 업소</u>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제안이유

지역상권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7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안이유

2022년 수영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지하수관리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관리위원회 비상설화(제4조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7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험도 평가”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
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이하 “구”라 한다)의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대책본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또는 건축 외 시설물(토목 등) 직무분야 기술사
2.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 분야 또는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지진피해 구역 또는 시설물 등으로 평가단을 나누어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대책본부장이 평가단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①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의 실시)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진 피해 지역 주변 시설물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여부, 치안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평가단원이 위험도 평가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9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시설물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시설물에 표시해야 한다.

1. 위험등급 :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표지
2. 사용제한 등급 :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제한표지
3. 사용가능 등급 :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가능표지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등급인 경우에는 시설물에 별지 제5호서식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운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재난대책본부장 또는 인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재난대책본부장 및 인근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1조(평가단원에 대한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 하거나 부상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앞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주 소 :

사 진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별지 제2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빨강>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연락처 :)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input type="checkbox"/> 평 가 자 :		
<input type="checkbox"/>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연락처 :]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연락처 :]

[별지 제5호서식]



◆ 제안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주요 조치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효율적 구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험도 평가의 정의 및 적용범위(제2조~제3조)
- 나.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제4조)
- 다. 위험도 평가단의 관리 및 교육 등(제5조~제6조)
- 라.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조치(제7조~제10조)
- 마. 평가단원에 대한 지원 및 운영세칙(제11조~제1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함이 적법하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제7조제1항 중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를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으로”를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주사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해당 지원사업”을 “지원사업 대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정을 기할 수 없는”을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 ----- ----- ----- -----.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신설>	6. 옥상 출입문 비상문지동개폐장치 설치
6. 그 밖에 공익사업 및 공동이용시설 중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7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u>구청장으로</u> 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	제7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u>관리주체는</u> 제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u>주체는</u>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u>이내에</u> -----
해당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	-----
하여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 <u>따른</u>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
있다.	---.

<p>② (생 략)</p> <p>제12조(구성 등) ①~② (생 략)</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u>으로 한다.</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한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p> <p>제15조(회의 등) ①~② (생 략)</p> <p>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1. <u>해당 지원사업</u>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p> <p>2. (생 략)</p> <p>3. <u>공정을 기할 수 없는</u>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u>주사-----.</p> <p>④----- <u>한 차례만</u>-----.</p> <p>제15조(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u>지원사업 대상인</u>----- -----</p> <p>2. (현행과 같음)</p> <p>3. <u>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u>----- -----</p>
--	--

◆ 제안이유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한 피난 활동을 위하여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유형 추가(제4조제1항)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제7조·제12조·제1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취임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

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업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공무원증)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警戒)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에서 무단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회 소속 여성공무원과 부부공무원 중 1명은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단, 부부공무원 중 1명이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겸임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지휘·감독 한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의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반일(오전, 오후) 또는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별표 4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 신병훈련 수료식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1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하지 않음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3조제1항)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제안이유

현실에 맞지 않은 표현 등이 포함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2022년 노·사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제6조)
- 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제7조)
- 다.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제1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회”를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호 중 “소속 지방의회”를 “의회”로, “그 지방의회”를 “의회”로,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수영구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영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수영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호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제12조제2호”를 “제16조제2호”로 한다.

별표3제3호 중 “10만원”을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현행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를 “제3호”로 하고, “경우에는 각각”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를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20조 및 제2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u>서면</u>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 ----- ----- ----- <u>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u> <u>이하 같다.)</u> -----
제8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u>의회</u> 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출석) ① ----- ----- ----- <u>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u> <u>한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① 의원은 <u>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u>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u>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u> <u>이하 같다)</u> 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u><삭 제></u>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 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 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 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 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5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수시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외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 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11조(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삭 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가족 채용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생략)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설>

<신설>

<신설>

제2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1. (현행과 같음)

2. 의회-----

의회-----

-----전가(轉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

가. 수영구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영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수영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

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8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제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4.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삭 제>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제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p>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 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u> 제29조(경조사의 통지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p> <p>1. (생 략) 2. <u>해당 지방의회의 의원</u>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4. (생 략) 제3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 척된다.</p> <p>1. (생 략)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u>제12호제2호</u>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5. (생 략) ② (생 략)</p> <p>[별표 3]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1.~2. (생 략)</p>	<p>제29조(경조사의 통지제한) ----- ----- ----- ----- 1. (현행과 같음) 2. <u>의원</u> ----- ----- 3.~4. (현행과 같음) 제3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u>제16호제2호</u>----- ----- 3.~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1.~2. (현행과 같음)</p>
--	---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 고

가. (생 략)

<신 설>

3.

----- 10만원(「부정청탁 및 금
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

비 고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합
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
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
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
서는 안 된다.

<p>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다.·라. (생략)</p>	<p>다. 제3호 ----- ----- ----- ----- ----- 경우에는 ----- ----.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p> <p>라.·마.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p>
---	--

◆ 제안이유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022.5.19.)에 따라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삭제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 주요내용

- 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및 별지 삭제
(제9조~제13조, 제20조, 제28조, 별지 제2호~제5호, 제13호)
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에 따른 기준 금액 조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7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제3조 관련)

연 도	월 정 수 당
2023년	월 2,399,25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합산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합산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합산금액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2022년 수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제3조)

-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별표1)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장의 임명) ①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며, 해당 동의 여건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반장은 반원 중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임명한다.

③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통·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통·반 지역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경우
2. 통·반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활동 실적이 극히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5. 해당 통·반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통·반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4조(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통·반장의 등록) 동장은 제2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신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통·반장 등록부에 임명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반상회)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행정시책 및 공지사항 전달
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
3. 수혜대상자 선정
4. 새마을사업에 관한 협력
5. 방범신고망 운영
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③ 반장은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임명된 통장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장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임명장

주 소 :

성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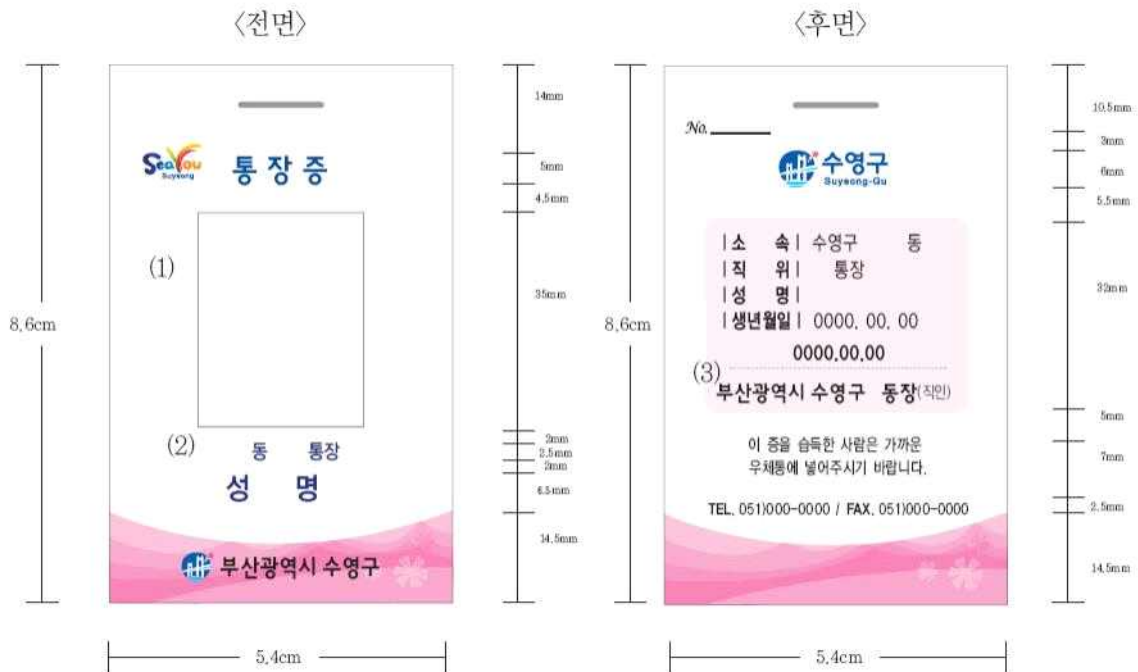
귀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제○○통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 ○ 동장(인)

【별지 제2호서식】

통장신분증



※ 1. 위의 (1),(2),(3)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1) 사진
- (2) 성명
- (3) 발급기관의 직인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종류	글자크기
전면	통장증	Asia탈영고딕B	16포인트
	동 통장	Asia중고딕	10포인트
	성명	Asia태고딕	15포인트
	부산광역시 수영구	Asia탈영고딕B	10.5포인트
후면	No.	Lucida Calligraphy	7.5포인트
	소속,직위,성명,생년월일	Asia신고딕	9포인트
	발행일자	Asia신고딕	9포인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Asia탈영고딕B	9.5포인트
	이증을바랍니다.	Asia중고딕	7.5포인트
	TEL, FAX	Asia신고딕	7.5포인트

3. 사진 규격 : 2.7cm×3.5cm

4. 신분증 규격 : 5.4cm×8.6cm

5. 신분증 재질 : 플라스틱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장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통·반장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통·반장의 임명·해임에 관한 내용(제2조~제3조)
- 나. 통장 임명 또는 해임의 보고(제4조)
- 다. 통·반장의 등록(제5조)
- 라. 반상회 내용 규정(제6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10조제3항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배출자는 1세대 당”을 각각 “배출자 1세대당”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례 제1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장 배출일자별 20ℓ 용기
1통에 해당하는 수수료 감면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납부필증 무상지급 및 수수료 감면 지급기준) <u>조례 제10조제3항에</u> <u>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u> <u>지급한다.</u>	제6조(납부필증 무상지급 및 수수료 감면 지급기준) <u>조례 제10조제3항의</u> <u>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납부필증 사용 배출자는 <u>1세대 당</u> <u>월20ℓ</u> 이내에 해당하는 납부필증 제공	1.----- <u>배출자 1세대당</u> -----
2. 개별계량장비 사용 배출자는 <u>1세대 당 월 15kg</u> 에 해당하는 수수료 감면	2.----- <u>배출자</u> <u>1세대당</u> ----- -----
<u><신 설></u>	3. <u>조례 제10조제3항제5호에</u> <u>해당</u> <u>하는 영업장 배출일자별 20ℓ 용기</u> <u>1통에</u> <u>해당하는 수수료 감면</u>

◆ 제안이유

지역상권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지원 기준 마련

◆ 주요내용

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 추가(제6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해영향평가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 평가등의 협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회의 개최 또는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심의의견서로 본다.

[별지 서식]

심의의견서

계 획 명	
1. 총괄의견 2. 공통사항 의견 3. 세부검토의견(토지, 재해 등) 4. 그 밖의 의견	
의 결	원안 통과() 보완 요망()

상기와 같이 협의 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검토자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제안이유

- 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함이 적법하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 나.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 주요내용

- 가. 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제1조)
- 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제2~3조)
- 다. 위원 구성 및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 직무(제4조~제7조)
- 라.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 마. 현지조사, 심의의견, 회의록에 관한 규정(제9조~제10조)
- 바. 위촉위원 수당 및 운영세칙(제11조~제12조)